

민주당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될 때까지 농성

초선 모임 처럼 “검사독재 정권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 ‘이상민 탄핵안’ 당론 추진... ‘김건희 특검’ 대국민 여론전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상민 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라는 쌍끌이 전략을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섰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 의원 모임’을 결성해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농성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제

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강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폭정 앞에서 180석이 넘는 야당은 무엇을 하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국민들의 물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파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도 했지만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회가) 이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법이란 잣대가 누구에게나 성역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죽었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듣고 되도록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검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어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

가 필요하다. 법사위 내에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가 결집되고, 18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여론전을 통한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날 출범한 당내 ‘김 여사 추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검찰독재저지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 故 김문기 재판 출석할 듯

공판기일 지정... 피고인 출석 의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전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신정훈 의원 ‘시·도당 당원 교육 활성화법’ 발의

“선거운동, 참여 중심 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일 시·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조적·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품·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재료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재료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

다. 신정훈 의원은 “당원의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도당이 활성화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장기 라운지

김나운 시의원,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산업 발굴”

정부의 반도체특화단지 선정에 대비한 지역 반도체산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광주시의회 김나운(민주·북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해당 상임위원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도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산업 전문 인력 발굴·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원 및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특성화대



학 등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산업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우리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지원·육성 환경조성이 목적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h2>상가매매 (상무지구.유형적합) (임대가능)</h2>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 유형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융4억) <p>(보4천, 월수익 400만)</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010-6670-9800</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tr> <tr><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tr> <tr><td>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td></tr> <tr><td>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tr> <tr><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td></tr> <tr><td>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tr> <tr><td>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td></tr> <tr><td>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td></tr> </table> <p>010-2614-9801</p>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동구 금남로 (주택) ▶ 감정가 2억5천만 → 최저가 1억1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천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2억1천									